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7. 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수정이유

개정안은 대규모사업 등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하고,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요건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측면을 보완하고,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려는 것임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요건을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에서 규모 및 행위 등으로 수정함(안 제21조제7항 단서).
- 나.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·사용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함(안 부칙 제2조 신설).

다.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(안 부칙 제3조 신설).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1조제7항 단서 중 “목적 및 규모”를 “규모 및 행위”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당하는 경우에는 원
상회복에 필요한 비
용에 해당하는 금액
을 예치하게 하여야
한다.

부칙
이 법은 공포 후 1년
이 경과한 날부터
시행한다.

-----.
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법
은 공포 후 1년
이 경과한 날부
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상회복비용
예치 의무화에
관한 적용례) 제
21조제7항 및 제
8항의 개정규정
은 이 법 시행
이후 공유수면관
리청이 제8조에
따라 점용·사용
허가를 하는 경
우부터 적용한
다.

제3조(이행강제금 부
과에 관한 적용
례) 제54조의2의
개정규정은 이

		<u>법 시행 당시 원</u> <u>상회복명령을 이</u> <u>행하지 아니하고</u> <u>있는 자에 대해</u> <u>서도 적용한다.</u>
--	--	--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5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1.

발 의 자 : 조경태 · 성일중 · 유용원
정성국 · 박정하 · 김소희
우재준 · 김태호 · 백종현
서일준 · 고동진 · 김재섭
안상훈 · 정연욱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원상회복비용”이라 함)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,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·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, 제54조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요건을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에서 규모 및 행위 등으로 수정함(안 제21조제7항 단서).

나.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·사용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함(안 부칙 제2조 신설).

다.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(안 부칙 제3조 신설).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이행강제금)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

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신 설>

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4조의2(이행강제금)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
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
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
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
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
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
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
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
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
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
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
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